

인도네시아, 광물수출 금지 “난항”

직접 가공하면 전력 1GW 이상 필요 ... 수출금지 시행 연기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원보호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광물 수출금지 조치에 전력 부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월23일 보도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싱가포르 사무소의 사비에르 진 부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대로 2014년까지 모든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가공하려면 1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기업 PLN의 누르 파무지 사장은 1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5월 가공되지 않은 금속 원광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2014년까지 금속 원광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출금지 조치는 국내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원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원수입국들로부터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S&P 부국장은 “인도네시아기업들은 대규모 제련시설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까지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 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파무지 PLN 사장은 “제련시설 건설에는 공급이 원활한 자바가 적절하며 발전소도 제련시설 인근에 건설해야 한다”며 “제련시설에 적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3>